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 11. 28.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4. 11. 4.(월) ~ 11. 17.(일) <14일간>

※ 제327회 정례회 : '24. 11. 1.(금) ~ 12. 20.(금) <50일간>

3.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4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주택실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도시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디지털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김 태 수	수석전문위원 윤 은 정 의사지원팀장 김 숙 희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 민 석	행정6급 이 정 현
"	더불어민주당	서 준 오	행정7급 조 동 룬 행정9급 오 태 민
위 원	국민의힘	고 광 민	사무운영 박 영 신
"	"	김 영 철	입법조사관 한 승 윤
"	"	김 종 길	입법조사관 김 태 훈
"	"	김 현 기	입법조사관 조 윤 길
"	"	박 석	입법조사관 전 재 성
"	"	옥 재 은	정책지원관 신 아 현
"	"	최 진 혁	정책지원관 강 주 연
"	더불어민주당	박 승 진	정책지원관 금 민 정
"	"	최 기 찬	정책지원관 김 지 혜 정책지원관 박 주 용 정책지원관 배 재 현 정책지원관 송 명 희 정책지원관 이 승 미
○ 속기 및 녹취요원(3명)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4. 11. 4.(월)	10:00	주 택 실 (1 일 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4. 11. 5.(화)	10:00	주 택 실 (2 일 차)	"	
2024. 11. 6.(수)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4. 11. 7.(목)	10:00	현 장 확 인 감 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사옥	
	15:00	서울주택도시공사 (1 일 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4. 11. 8.(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 일 차)	"	
2024. 11. 11.(월)	10:0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	
2024. 11. 12.(수)	10:00	디 지 털 도 시 국	"	
	16:00	서울디지털재단		
2024. 11. 13.(목)	10:00	주 택 실 서울주택도시공사	"	중 합 확인점검
	14:0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디 지 털 도 시 국 서울디지털재단		
2024. 11. 14.(목)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4. 11. 15.(금)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 방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 다가구·원룸 등 매입임대주택 총괄에 관한 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사업관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 노후 저층주택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휴먼타운 2.0/뉴빌리지) ◦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 ◦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정부 및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정비사업 통계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정비기반시설 입체·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 G밸리 주변지역 주택 확대방안과 관련된 사항 ◦ 부동산 이상거래 및 투기방지대책과 관련된 사항 ◦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건축 관련 법령(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주택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미래공간기획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선정사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노들 글로벌 예술섬 계획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국내·국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등 주요 도시공간 기획에 관한 사항 ◦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 송현문화공원 등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관람차 사업추진 등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기획에 관한 사항 ◦ 지하철역사 혁신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지털도시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계획 수립·활용·조정에 관한 사항 ◦ 디지털정책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전자정부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디지털도시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조정·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시스템 구축·운영 ◦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 스마트조시 등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디지털도시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에 관한 사항 ◦ 건축 및 토목 조경공사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골드시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디지털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236	54	117	65
주 택 실	83	9	55	19
미래공간기획관	46	2	25	19
디 지 털 도 시 국	41	17	19	5
서울주택도시공사	60	24	14	22
서울디지털재단	6	2	4	-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사항 54건

[주택실] — 9 건

1. 애드가 쌍문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 공동체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울보증보험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공동체주택이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 주거용은 불법임. 공동체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가 미 실시 되었음. 공동체 주택의 공공지원 재검토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
3.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2월 공공리츠 개발 용역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전용함. 의회에서 예산 확정인지 얼마 되지 않아 2월에 바로 전용한 것은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도봉구 청년안심주택에 살던 6 가구가 민간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 같음.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음.
5. 반지하 매입 심의 가결이 1,435호인데 매입약정은 47호임. 공고 후 4,684호가 심의에 올라갔는데 부결이 절반 이상임. 반지하 매입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신경써주기 바람.

6. 10.31.자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클린임대인 등록 임대인이 14명, 매물이 1로 되어 있는데 기사 정정해야 함. 제도는 좋은데 신청자격이 너무 높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
7. 최근 5년간 용역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음. 행감 자료가 충실하지 않음.
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토지가 우정사업본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착공 공사때까지 몰랐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공사를 중단했어야 함. 변상금과 사용료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매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지. 비엔날레 추진하려고 무리하게 공사한 것 아닌지.
9. 평창동 사회주택 적정성 재검증 필요함. 40%가 개발 불가하나 필지 전체를 매입했고 결국 매각함. 평창동 토지의 경우에만 대지면적과 매입금액이 월등히 높으며, 해당 필지 방치되고 있어 지역사회 위험요소임. SH 자체감사가 힘들것 같고, 서울시 감사청구를 요청함.

[미래공간기획관] — 2 건

1.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개선 필요. 임기 내 활동 이력이 없는 연임 공공건축가도 있음. 지난해 추진한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2. 설계공모 심사 시(잠수교 사례처럼) 공모작에 대한 안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디지털도시국] — 17 건

1.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시 예산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WeGO 회원국들의 회비 징수율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3. 시에서 국제부담금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의회의 감시가 약한데 이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4. 스마트라이프워크 행사 시 일부 참여기업, 시민 인터뷰에서 불만이 있었고 행사 종료 이전 부스를 조기철수한 사례가 있었음
5.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수가 매우 저조한데 개선 필요
6. 에스플렉스센터의 임대료 체납업체에 대한 법적검토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7.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및 노후 CCTV에 대한 조속한 교체 필요
8. 서울시민이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예약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바람
9. 서울톡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챗봇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성, 운영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0. 서울톡 챗봇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용자수도 적으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함. 투입공수 점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
11. 스마트서울뷰 사업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평가 비용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효과대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개선 바람
12. 디지털도시국 소관 정보화사업 유지보수에 50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시 예산타당성 검토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검증 필요

13.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2등급 시스템 대상 원격이중화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14.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예산 단위사업 명칭과 그에 편성된 일부 사업내용이 상충이 됨
15. 에스플렉스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업체에 대하여 조속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16.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에 대한 공개율은 높으나 부분공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과도한 부분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17. CCTV, 공공와이파이 보급에 자치구별 편차 해소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 24 건

1. 주거안심종합센터 변호사 배치 관련,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는지? SH는 대응방안 검토 요청.
2. 임대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3. 골드시티사업 추진 시 타 지방 공사와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지방 공기업과 공사 설립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4. 임대주택 방역 시행 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횟수·품질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정리-청소-소독 이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
5. 골드시티 관련, 서울시민이 얻을 메리트 (우선 입주나 특별공급 우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 과업에 해당사항을 포함시킬 것.

6. 매입임대 사업비 정산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당한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
7. 매입임대 하자관리 시 공사는 별도 비용을 투입하여 하자적출 용역
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입임대 매매계약 추진 전 철저한 품질점검이 필요
8. 매입임대 관리업체 선정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
토할 것.
9. 평창동 소재 토지를 토지지원리츠 사업을 통해 선매입 했는데, 사회
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를 부적절한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
해 보임.
10. 미매각 부동산들이 방치 중인데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함. 가
든파이브의 경우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적극 전환하여 관리할 것.
11.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
12. 근린생활시설용지 관련, 권익위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 등 제반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라고 하였음.
SH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토지매각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13. 재개발임대 수수료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빠른시간 내에 용역
등을 추진하여 해결할 것.
1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신규사업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되
어 있는데, 민감도 분석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15. 새원마을 보상 이후 별도 추진 사항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
시와 신중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

16. 근로기준법에서 임신·육아·출산·사산 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한 경우가 있는데,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람.
17. 직원 수 대비 적정 법인카드 총량을 산정하고, 분실방지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18. 저장강박세대로 인한 임대주택 화재 발생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세대별 방문점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점검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19. 관리사무소 직원의 하자발생 세대에 대한 욕설 등 갑질 사례가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람.
20. 혼합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임대세대가 과반임에도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SH의 역할이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특히 마곡지구 특정단지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업체와 6년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람.
21. 주거안심종합센터 인력배치 시, 전문자격증 소지 직원채용 관련 지침과 인력배치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22. 임대주택 공가 종류 중 실질적인 공가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공급 불가 공가)은 표현 변경을 검토.
23. 위탁관리업체 관리운영 관련, 종합평가 시 부적격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업체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
24. 특정업체에서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참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약기준 개선 필요.

[서울디지털재단] — 2 건

1. 장애인 의무고용,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의무 고용을 적극 실천해주시기 바람
2. 경영평가 결과가 3년 간 '다 등급' 수준인데 상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나. 건의사항 117건

[주택실] — 55 건

1. 시공사 책임준공 없는 PF가 있음. 천안 공공주택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에서 벗어나 하자없이 준공할 수 있는 실익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도 이 같은 사례를 개선방안으로 동의하는지?
2. 정부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LH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SH는 부수적으로 참여하는데 서울지역 사업에는 SH가 주로 참여하여야 함.
3.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오프라인 수강생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음. 교육프로그램에 공사비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4. 정비사업 공급관련, 정부는 인허가 기준인데 서울시는 구획지정 기준으로 실제 공급까지 차이가 커서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신통과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처음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문제가 생기니 진입구조를 높여 신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5.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미지원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6. 역세권장기전세 등은 면적기준산정에 국공유지를 편입하여 반영하지 않는데, 신통은 국공유지를 편입하여 인정해주고 있는데 신통이 역점사업이다 보니 차별적 요소라고 생각됨. 기준이 원칙적으로 필요함.
7. SH 미정산 관련 SH와 서울시간 수천억 금액간 괴리가 있음. 이부분을 그대로 두고 매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8. 주택실 내 자문기관 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자체 방침으로 설치 운영중인 자문기관들이 있음. 빈집정책자문위원회는 실장방침으로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음. 조속히 조례 설치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미비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함.
9. 현재 서울의 당면 과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하며, 상식파괴 정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함. 서울은 택지가 부족한데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공원이 아닌 신흔부부 주택을 지어야 함. 또한 소득규제 해제 위해 정부에 건의 한 적 있는지?
10. 신흔부부를 위한 둔촌동 미리내집 공급에 임대주택 1,000호 중 300호를 공급했는데 너무 적었던 것 같음.

11. 청년안심주택 문제가 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이 지원되었음. 10년 동안 지원해 준 경우도 있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게 더 나을 것임. 청년안심주택은 사업 확장이 아닌 출구전략을 세워야 함. 시행자들만 혜택을 받아 지속할 당위성이 사라졌음.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제공된 인센티브는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함.
12. 클린임대인 제도는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하나 신청이 저조한데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년 본격 시행 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13. 전세피해 예방 동영상이 업로드된 주거포털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14.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임시주택은 LH 공가를 활용하는데 SH공가 활용을 해야 함.
15. 안심고시원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소유주가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6. 공사비 초기 검증이 잘 되지 않고, 추가 검증도 부실하여 공사비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늘어나는 비용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함.
17. SH감사 결과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자치구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매입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청년안심주택등이 공급되어 상쇄됨. 매입단가 상한폐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매입임대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

18. 승강기의 중대고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증액 필요할 것 같고, 경기도의 장기수선 표준화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신축아파트 승강기 검사 기준규정은 왜 7년전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개정이 필요한지?
19. SH 본사 이전 진행이 부진함. 26년 착공이 어려워 보임. 주택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
20.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자문단에 주택건설협회 및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겠음.
21. 민간부동산 제공 입주정보와 서울시 발표 수치가 편차가 커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킴. 시가 하는 발표는 공식적이고,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니, 보정을 최대한 해서 개선해야함. 보완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22. 청년안심주택 준공은 계획에 비해 매우 미비한 상황임.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발표해야 함. 사업자가 신청한곳이 대상지가 되다보니 갈등이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김. 안정감 줄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민해봐야 함.
2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함. 입주자 회장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고소 고발 등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송비용을 대납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규제해야함.

24.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파산 또는 비위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구청장이 주택설립조합 취소할수 있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음. 비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바람.
25. 주택실에서 SH의 사회주택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창동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매입했다가 처분한 사례가 있음.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함.
26. 지원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 대비 매우 적으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음. 또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을 매입해 추가 공사로 세금을 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운영위원회 연2회 개최를 위해 조례개정안 발의할 예정임.
27.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분 임기가 곧 종료되는데,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28. 서울시는 장기전세2에만 소득규제 완화를 요청함. 저출생 대책으로 일반주택 공급 시에도 소득규제 완화가 필요함.
29. 모아주택은 준비없이 시작되어 추진이 안되고 이웃끼리 원수만 되고 있음. 투기대책 및 근본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30.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SH 매입임대가 감소하기 때문임. SH는 주택실이 감독하는 산하기관이나 서울시 방침에 따르지 않음. 주택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장치가 없기 때문임. 평가, 예산, 인사권 다 기초실이 가지고 있음. 규정을 개정해야 함.

31. 2005년 이전 준공한 노후 임대단지는 34개이며 노원구가 가장 많음. 76%가 저소득층이며 자살률도 높음. 노후 임대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영구임대로 이주 중이나 법적 규정이 미비함.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함.
32. 하계 5단지는 당초 삼구형에서 삼육형으로 바뀜. 고품질 임대주택 만들겠다더니 평형수를 줄여 주민들이 납득 안됨. 또한 중요한 시설인 보건소도 빠짐. 영구임대에 대해 고품격 주택으로 갈건지 서울시가 방향을 정해야함.
33. SH가 운영중인 주거안심종합 센터 자치구별 상담인원의 편차가 있음. 예산 배분 등 검토 필요함. 인력중 자격증 미보유 자도 있는데 지침에 맞는 것인지. 센터별 월별 실적 자료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없다고 하는데 SH와 협의해서 평가 등 필요함.
34.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의무가 아닌데 계획을 세웠음. 당해 구역 임대주택이나 타구역 재개발임대주택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조건이 안되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구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 책임있다고 봄.
35.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고시 후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곳이 있음. 자치구 공모통해 선정된 경우 제대로 된 통지 없이 시행됐고,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된 곳이 많음. 관리계획 고시후 해제 근거 마련이 필요함.
36. 도심복합개발 법률 시행령 부재로 사업지 검토가 어려움.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지 판단 필요하며,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논의 필요함.

37. 주거기본조례를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법률상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시행 중인지. 16개소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SH 직영운영의 장단점이 있음. 내년에 용역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
38.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미청산 되고 있음. 조합장이 청산업무 게을리 할 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데 정비사업 완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청산 안할 시 조치 실행되고 있는지. 조합점검과 해산 요청 필요하며,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서도 점검 필요함.
39. 조합 청산계획을 준공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준공 이전에 청산계획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함.
40. 서울시 예상 입주물량의 연도별 편차가 크고, 민간업체와 수치 차이가 너무 큼. 시장에서 아파트로 포함하지 않는 물량은 서울시에 서도 비아파트로 분류해야 함.
41. 청년안심주택 예상 공급량과 목표치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청년안심주택이 민간 매각되면 일시에 정책이 종료될 수 있음. 공공이 지속가능하게 책임질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함.
42. 녹색건물 추진 기준 변경 1년도 안돼 재변경 하고 있는데 지열에너지로 인한 안전성 검증은 됐는지, 지열 에너지 기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현장조사 공사까지 기간 소요가 많다고 함. 지열에너지 저주파 소음 등 예상 문제가 많은데 지열에너지 의무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생자문위원회 대신 결의기능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녹색건물 인증건수가 급감하고 있음.
43. 청년안심주택이 30년후 민간 분양으로 돌아갈 때 거주 청년 대책 필요함.

44. 전세사기 가해자는 가해자로 확정될 때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제재 조치가 필요함.
45. 임대주택 관리를 LH는 직영, SH는 위탁운영 중인데 시범적으로 직영 운영 검토가 필요함.
46. 임대주택 내 갈등이 관리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음. 직영방법 및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함.
47. SH 공사비 검증 인력에 금융 전문가가 필요함. 레미콘 회사가 제때 도착 못하는 이슈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하계 5단지 공사비 문제도 지속 관리하기 바람.
48. 매입임대주택 계획 달성 가능한지.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함.
49. 주거안심종합센터 자격증 소지자 근무 기준이 SH와 서울시의 지침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50. 내곡 세원마을은 15년에 보상하고 22가구가 잔존하여 방치되고 있음. 서울시가 명확히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람.
51. 수서택지 지구는 집을 새로 짓는 것임. 도시개발을 벗어나면 주택실 소관이 됨. 수서지구 개발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보임. 주택실의 견해를 보고해주기 바람.
52.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구릉지로 지형적 여건상 사업성이 부족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내년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정비 용역을 준비 중인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조기 시행되어야 함. 또한 재정비위원회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53. 골드시티 사업은 SH 단독 사업인지, 주택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하실 필요가 있음. 6억짜리 용역을 공사가 왜 선제적으로 하는지 공사가 앞서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공동사업자와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과업지시서에 서울시민이 우선 이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정량 평가 꼴찌가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직원도 3명인 소규모 업체가 용역을 받아 석연치 않음.
54. 매입임대 정산과 관련하여 시는 2,200억을 받아야한다, 공사는 3,500억을 받아야한다고 서로 주장이 엇갈림. 각자 입장이 달라 정리가 안되고 있고 양 기관 간 금액 차이가 있다보니 소송으로 갈 여지가 크다고 봄. 담당 선에서 협의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과 공사가 타당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함.
55. 중구에 있는 우리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도시계획에 걸려있다고 들었음. 우리집은 화장실도 대문도 못 고치고 있음. 15개동 모두가 지구단위계획에 걸려있음. 이런 점을 주택실에서 자치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함.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20년부터 중구는 집행률이 가장 낮음. 자치구별 예산 배분이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지.

[미래공간기획관] — 25 건

1. 공공유희공간 활용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런 베이스) 장소는 환승역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석계역, 돌곶이역 등 유희공간이 많은 역사가 있음.
2.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3.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 및 적격성조사 등 진행중으로 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여 주기 바람. 최초 발표 때 5800억, 민간제안 9200억, 그 이후 1조871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적격성조사 의뢰 시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 절차가 있는데 적격성조사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4. SH공사의 참여도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추진과정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만 해도 되는 건지? 신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5.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을 강화시킬 것.
6.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교통분야 전문가도 추가 위촉할 것.
7. 방배 5구역 재건축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되어야 함. 전문체육인 등 소수를 위한 체육시설이 되면 안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맞게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바람.

8. 용역 품질 검수를 위하여 발주한 목적과 활용성에 맞게 성과품이 완성되었는지 전문가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함.
9. 남부터미널 부지 일대 개발구상안 마련 필요. 주변 지역 슬럼화로 도시 활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필요함에 따라 행정 주도의 미래 공간 창출 공간 구상안 마련. 남부터미널 일대 도시 활력을 위한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 추진 의사 문의.
10. 대관람차 조성 관련 지반조사의 경우 매몰비용 발생 및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개월 단축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했던 건지?
11. SH 본사 이전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내용 별도 보고바람.
12. 노들섬 홍수 관련 안전 문제는 없는 건지? 사업추진 방식을 바꾼 것은 특정 건축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닌지? 설계공모자가 무분별하게 예산 증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준공 후 상단부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바람.
13.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관련 경쟁 도시 대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유치한게 예상되니 치밀한 계획 및 적극적 대응 필요.
14. 마포농수산물시장 공간기획 시 무산된 경기도 CJ라이브시티 사업과 같이 민간자원 검토 요청.
15. 곤돌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유도와 연결한다고 하는데 송전탑 지중화 등도 함께 계획되는 것인지?

16. 민간(신세계백화점,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등)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시청역 지하공간 편 스테이션 조성 시에도 이런 미디어 파사드 적용 검토 필요.
17. 편 스테이션 선정 역사가 동측에 집중되어 있고, 서남권은 타 지역 대비 거점 공간이 부족한바, 서남권에 대한 추진 검토 요청. 강서구의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마곡나루역의 경우 서울식물원으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요청.
18. 「사전협상 운영지침」 관련, 제도개선 사유, 3종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여 미부과 개선 사유.
19. 사전협상 완료 후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재협상 후 감정평가시 감정평가 비용부담(공공:민간=5:5) 적정한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측 전액 부담 적정.
20.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시 민간 측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 필요 (잘못은 지침 개정은 사업자 혼란 우려).
21. 사전협상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
22. 공공토지자산 및 공공시설등설치기금 관련 업무에 관한 추진조직을 사전협상 추진 총괄부서로 일원화 필요. 공공기여 관련 기준(공간본부) 등 내용 설명 필요.
23. 균형발전 사전협상 관련 검토대상지, 기존에 협상을 완료한 대상지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적용 가능 여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적용 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대상지 선정은 사전협상제도의 추진부서 일원화 방향과 배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기간 3개월 가능 여부.

24. 향후 총괄건축가 위촉 시,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를 포함 검토할 것.
25.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 집행내역에 공공건축 간행물 용역비용과 우편 발송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있는데, 일괄 용역으로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디지털도시국] — 19 건

1. 서울기록원 보존서고가 2030년에 95% 정도까지 만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함
2. WeGO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3. 서울지갑 앱에 대한 구글 평점이 낮음.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통합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4. 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성을 고려하여 동부권, 동남권에도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이 필요함
5. 각 CCTV 관제센터의 1인당 관제대수 등 자치구별 고르게 운영하는 방안 필요
6. 지능형 CCTV 보급에 대한 자치구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치구 독려 필요
7. 현재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CCTV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SLW 관련, 첫 행사 개최로 나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경쟁도시, 경쟁민간행사 대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보고할 것. 특히, 글로벌리더십 확립 등 거대담론으로 인한 내실 보완에 주력할 것

9.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출범시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소, SAP 등 전문영역을 확보한 기관이 입주했으나 모두 철수함. 원인과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0. 서울디지털재단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연계성 확립. 재단의 강남 이전 등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할 것
11.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민대상 사업임에도 10년이상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12. 보안에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해킹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13. 직원들이 사이버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바람
14. 직원 근무성적 평가에 정보보안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15. 보안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업무지원시스템 조속히 추진 필요
16. 대시민 서비스로서 데이터 복지 차원에서 서울면적 대비 공공와이파이 공급범위에 대한 목표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17. 버스정류소 BIS를 활용하는 방식 등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 필요
18. 지하철 역사 내 와이파이 상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19. 웹3.0 행사 관련 대금 지급이 지연된 업체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서울주택도시공사] — 14 건

1. 콜센터 직고용 관련, 향후 노사전협의체에 주택공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하계5단지 관련, 이주택지 평형과 SOC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납득하겠는지? 당초 계획대로 SOC시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주절차나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가 필요.
3.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 등 문제점들은 SH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기 바라며, 의회 지적사항을 신속 보완하여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4. 매입임대 실적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5. 역세권 관련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역세권개발 사업화 용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시행할 것.
6. 장기 임대주택 거주자는 퇴거 후 주거사다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 (주)한강버스에만 사업을 맡기지 말고, 실시간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것.
8. 주거안심종합센터 인력관리 관련, 강남구의 임대주택 수 대비 직원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보장을 요청.
9.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는데, SH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람.
10. 가든파이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1.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공유숙박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공공주택특별법상 불법전대자의 입주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매입임대주택 기제식 주차비율에 대한 설계기준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실적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13. 최근 수행된 정비사업 발굴 용역 중 부실한 용역이 상당수 있는데, 불필요한 용역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을 수행하기 바람.
14. 사옥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기 바람.

[서울디지털재단] — 4 건

1. 디지털재단의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디지털 도시국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람
2.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사업 및 서비스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길 바람
3.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인데 내부적으로 복무 등 조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길 당부함
4. 스마트시티센터가 8층에 위치해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에스플렉스센터 1층 공간을 이용해서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람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65건

[주택실] — 19 건

1. 토지지원리츠 사업장 목록, 토지 매입방식, 사업자 선정 관련 등
2. 정비사업 아카데미 결과 등
3. 역세권 청년주택 진행사항(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
4. 저출생 주택공급 관련 소득규제 폐지 국토부 건의 공문
5. 제3차 미리내집 공급 예정지 및 1,2차 모집공고문
6.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산금 경위 공문
7. 긴급주거지원 관련 구별 LH 임대주택 공가 현황
8. 6~7급 점직 및 외부강의 현황, SH 심의 수당 기준
9. SH 정산 관련 25% 산출 근거
10. 공사비 검증 고도화 내용
1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명단
12. 주택실 사업추진 중 외부기관 관련 모니터링 오류 사례
13.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미이행시 조치 결과
14.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5. 감사위원회 및 서울시 조사 결과 지적사항
16. 서울주택공사 예산 및 인사 권한 변경 위해 개정 필요한 조례
17. 공동주택관리 관련(서면질의)
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김태수 위원 3번, 용역 관련) 재제출
19. 희망의집수리 업체 선정 근거, 구별 신청 및 선정 현황, 만족도 조사 등

[미래공간기획관] — 19 건

1. 수의계약 관련,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은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용역인지?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도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지?
2. 송현동 부지 내 이승만기념관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내용 별도 보고바람.
3.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세 개 시장을 아우르는 계획이고 컨설팅 용역은 세 개 시장 별도로 발주했는데, 쪼개기 발주 아닌지?
4.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관련 당초 선정된 평가위원이 위원회 개최시 변경된 사유.
5.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SH공사 사장의 공사 직접 개발 및 임대 보도('24.10.14.) 관련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추진했는지 여부.
6.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7. 미래공간기획관 용역 계약 방식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는?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한시적 특례기간은 지역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1억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미래공간기획관 수의계약은 1억 이상 용역이 65%로 매우 큰 비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 행정안전부 특례 연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원칙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바람.

10.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이 마곡 등 기존지역을 대상으로도 시행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내용 잘 검토 바람.
11. 사전협상 대상지별 추진 현황 (성동구 삼포레미콘 부지, 도봉구 성대 야구장, 서초구 서울레미콘, 송파구 송파ICT 부지)
12. 최근 입안된 수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하여 수서차량기지 및 수서공영주차장 개발과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람.
13. 11.14. 기준 집행률이 44.9%인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바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14.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관련하여 대형 버스 주정차 문제의 검토가 필요함.
15.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 입찰업체 목록 및 입찰공고문
16.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입찰업체 목록 및 입찰공고문
17.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혁신방안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서
18.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 수립 착수보고 자료
19.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집행현황 및 추진 경위

[디지털도시국] — 5 건

1. 스마트라이프워크 관련 ,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상 동행사업담당관에게서 경제정책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후 협정서 재체결 현황
2. 디지털시장실 이름변경 관련, 디지털시장실 구축 계획 및 구축비, 구축업체, 소요예산 현황 자료
3. WeGO 회원 도시 중 회비납부 상위 도시
4. 자치구 자가망 확충 및 CCTV 보안장비 설치 수요 전수조사 결과
5. 정보자원 통합관리 사업 및 노후장비 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건

1. 매입임대 관련 2023년도, 2024년도 다세대 등 빌라 주택 가격 통계
2.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
3. 한강버스 관련
 - 한강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한 모든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결과(일자별 정리)
 - 이크루즈 합작 법인 설립 전에 추가 출자가 불가하다는 내용 대여금도 못 가져온다는 내용 서울시와 SH와 통보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공문
 - 한강버스 120억 단기대여금 관련 이사회 속기록 전체
 - 전기추진체 도입 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지, 어떤 의견인지, 자문료를 얼마를 주었는지 등 내용 일체
 - 서울시 육상 충전설비, 관제시스템 추가 지원해주겠다고 의사표명한 내용

4. 임대주택 물건투척 관련 지난 8월 달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 건의한 내용
5. 콜센터 관련 질의(11.7.)에 대한 공사 입장
6. 골드시티 관련 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 내부 방침, 과업지시서
7. 강동구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8.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용역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착수보고
및 결과보고서
9. 5년간 SM그룹과 직접 거래 또는 수주한 현황자료(자회사 포함,
2019~현재까지)
10.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수수료 관련 용역 추진 내역
11. 고덕강일 근생 6-1 필지 계약 후 계약해지 사유
12. 청년안심주택 성범죄자 입주 관련 지난 7월 12일 입주자격 제도
개선 건의 내역
13.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제출
14. 서울도심(종로·중구) 저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발굴
용역』 계약내역서 제출
15. 가든파이브 처음 분양시점부터 연도별로 계약 현황, 관리비 현황
(분양, 임대, 공실)
16. SLW 예산 집행내역(행사비, 분담금, 부수 설치비용)
 - 참여 기업간 협의 내용, 계약 관계, 관련 예산 편성 집행 내역
 - 스마트 홈 부스 전시 참여 업체 선정 내역, 선정방법, 공사 내 부서별 협업내역

17. 가든파이프 연도별 계약현황(분양, 임대, 공실, 관리비까지 연도별로 작성, 가든파이프 준공시점부터 모두 제출)
18. 5년치 보증금 관리현황(발생원인별로 구분) 및 실제 계좌에 있는 내역으로 제출
19. 전기추진체를 예비선으로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였는지의 자료
20. 주택관리업자 종합평가 세부기준 및 심사서류
21. 2020~2024년 수의계약 연도별 건수, 수의계약 평가기준표
22. SH공사 전체 건축, 공공, 복합 전체 설계공모내역, 20~24.9월까지 일시, 사업명, 심사기준, 심사위원 구성, 사업비, 계약금액, 선정업체, 업체별 계약건수, 업체별 계약금액

[서울디지털재단] — 0 건